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2월 08일

| 금주의 이슈 |

- I. 서울시 '찾·동'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 3
- II. 고3 수험생 82%,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 / 9
- III. 지방선거 대비 강소(強小)도시권 육성 플랜 / 13



금주의 이슈

■ 금주(2월 첫째 주)는 교육, 지방자치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았으며, 제2편에서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대입전형에 대한 고3 수험생의 인식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제3편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소도시권 육성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1편 : 서울시 ‘찾·동’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은 복지-건강-마을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데 비해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의 관치화가 우려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찾·동’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 제2편 : 고3 수험생 82%,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

최근 입시를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의 학생은 수시에 비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확대해줄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행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가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복불복 전형’으로 서민·중산층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2편에서는, 향후 정시전형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3편 : 지방선거 대비 강소(強小)도시권 육성 플랜

지방 중·소도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재정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심지기능 강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제3편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2-5개 시·군을 연계하는 강소도시권 육성과 지방도시 연합 형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및 재정분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2018. 2. 8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1. 서울시 '찾·동'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작성: 이형선 연구위원 ☎02-6288-0526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은 청와대가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혁신 읍면동' 사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음. '찾·동' 사업은 복지-건강-마을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전례 없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그러나 ① 전례 없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데 비해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② 관제 자치 또는 자치의 관치화(?)가 우려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실상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혁신 읍면동' 사업이 논란이 된 바 있음
 - 쟁점은 200개 읍면동 시범사업에 들어갈 주민자치회 간사 및 전문가 인건비¹⁾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행안부가 제출한 예산 205억 6,200만원 전액 삭감
 - 현 정부는 '주민자치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했으나, 야당은 '좌파 완장부대 육성', '유사 공무원 증원',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관치'라는 논리로 반대
- 문제는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혁신 읍면동' 사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임²⁾

1) 정부가 200개 읍면동 시범사업에 들어갈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1인당 연간 2500만원), 20개 시군구에 3명씩 시범 채용하는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 인건비(1인당 연간 3000만원)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2)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은 지난 8.11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이라고 명명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 하 수석은 '혁신 읍면동' 사업은 서울시의 '찾·동'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하 수석은 서울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찾·동 사업을 기획한 바 있음)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전례 없는 예산(2017년까지 3년간 약 1,454억 원 투입)과 인력(3년간 2,452명 증원)을 바탕으로 ‘찾·동’ 사업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찾·동’ 사업

□ 추진 현황

-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찾·동’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건강-마을을 아우르는 사회복지 및 공동체 회복 추진 사업으로 2017년 현재 서울시 전체 동의 80%가 참여³⁾
 -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복지)와 주민자치구현(마을)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며,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동주민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전례 없이 과감하게 확대⁴⁾
 - 먼저, 동주민센터 인력을 크게 늘리고(16.1명 → 22.2명, 평균 7.1명 증원), 조직을 기존의 2팀(행정, 복지)에서 3팀(행정자치, 복지1·2)으로 개편
 -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인건비의 75%를 지원하면서 2015~2017년 3년간 총 2,452명(복지 담당 1,965명, 방문 간호사 411명, 마을사업 전문가(한시직 공무원) 76명)을 증원⁵⁾
 - 무엇보다 사회복지직 인원을 3배 가까이 증원(2명 → 6.6명, 4.6명 증원)하여 서울시의 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289명에서 126명으로 감소

3) 2015년 7월 서울시 80개 동(424개 동의 19%)에서 시작, 3단계 사업을 시행한 2017년 7월 현재 서울시 전체 동의 80%인 342개 동에서 실행(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

4) 관련 내용은 황금용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이 발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과 과제: 정책의 전국화에 따른 점검’(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7.11)이라는 글에서 참고한 것임

5)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플래너’, 가구별 복지 욕구 파악 및 상담을 하는 ‘복지상담 전문관’, ‘간호사’ 등, 마을 분야에서는 지역내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우리동네 주무관’, 주민참여 촉진과 주민 관계망 확장을 통한 마을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마을사업 전문가’ 등

- 앞으로 서울시는 2017년에만 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주민이 만드는 마을 공동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7년 기본계획, 2017.7)

□ 마을공동체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시장 취임(2011.10) 직후인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2015년부터는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12.2), 3명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했음
 - 2017년까지 975개 마을, 3,180명의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첫해에는 724억 원(종합지원센터 건립비 포함)을 사용하는 등 매년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 2012년 8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주민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및 현장조사, 컨설팅, 서울형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등을 담당
 - 구체적인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육아 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등을 추진

□ 서울시 및 사업 관계자의 자평⁶⁾

-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찾·동 사업('마을'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은 복지 확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

6) 관련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연구원, 2017.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7년 기본 계획」(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 2017.4) 「2016년 마을공동체 되돌아보기 발표 자료집」(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과 과제: 정책의 전국화에 따른 점검」(황금용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2017.11)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 구체적으로 동당 월평균 찾아가는 서비스가 2.6배 증가했으며, 1년간 복지 사각지대 7만여 건을 발굴·지원했고, 65세 및 0세 가정 방문으로 우울증, 치매, 자살 위험을 지닌 어르신과 산모 8,000건 조기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서울시민 100명 중 1명꼴로 참여했다면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
 - 2012~2015년 4,987개 사업에 총 12만 9천여 명(주민 모임 회원 수 기준) 이직·간접참여했고, 마을북카페, 마을배움터, 마을예술창작소 등 주민공동체 공간 240개소 조성
 -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성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형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했다는 자평

3. 검토의견

□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객관적 검증

- ‘찾·동’ 사업 예산은 2015년 190억 원, 2016년 544억 원, 2017년 720억 원으로 계속 증가(3년간 1,454 억 원)
 - 이는 지난 연말에 전액 삭감된 ‘혁신 읍면동’사업 예산 205억 6,200만원 보다 훨씬 많음
 -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3년 만에 2,452명을 충원했으며, 2017년에는 전체 720억 원의 3/4인 543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해 사회복지 인력 511명을 충원⁷⁾

7) 대상별로는, 사회복지담당 434명(신규채용 412명, 자체 재배치 22명 / 신규채용은 일반 공채 9급 368명, 민간경력자 채용 9급 44명). 방문 간호사 71명(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마을사업 임기제 공무원 6명(임기제 7급 신규 채용) 등임(「‘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7년 기본계획」)

- 문제는 전례 없는 인력 충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과감한 투자에 비해 성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만 키워 복지 확대에 대한 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⁸⁾ 까지 제기됨
 - 더구나 서울시는 홍보용 자료나 자화자찬 가득한 분석만 내놓을 뿐 사업의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 또한, 급격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 신규 채용 인력과 기존 인력과의 갈등, 고용 안정성 보장, 신규 직렬 마련과 같이 충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
- 무엇보다, 서울시가 전례 없는 예산과 인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찾·동’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함
 - 아울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진보좌파 인사들을 지원 하는 것이라는 비판⁹⁾ 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와 국회 상임위 등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관제 자치 또는 자치의 관치화(?)

- 관(서울시)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찾·동’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자치와는 충돌하며, 민간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일방적인 관치로 흐르면서 민간은 여전히 종속적인 동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

8)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김보영 영남대 교수, 참여연대칼럼, 2017.6.1.)에서는 “이러한 상태로 찾·동이 계속 확대되지만 한다면 공공 전달체계 개혁에 있어 주목을 받은 만큼 치명적인 실패의 사례”가 될 위험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

9) ‘박원순표 포퓰리즘 끝판왕 마을공동체 실체는?’(미디어펜, 2016.7.4.)이라는 보도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라고 비판

- 관련하여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 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¹⁰⁾ 을 유념해야 함
- 마을공동체가 생활안전, 먹거리, 복지, 건강, 육아, 교육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의문
 - 개방적이어야 할 마을이 폐쇄적으로 ‘끼리끼리’만 만나는데 그치거나 주민 공모사업이 ‘예산 따기’로 변질됐다는 우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오히려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됨
- 또한, 관에 의한 주민 정보 수집은 과잉행정과 윤리 문제를 야기
 - 공공의 역할은 국민의 시민적 자유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그 선을 넘으면서 가부장적인 과잉행정과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윤리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¹¹⁾
 - 예컨대, 주민들을 방문하는 복지플래너는 주민의 욕구 파악을 넘어 민감한 개인 정보(질병, 우울감, 자살생각, 종교 등)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과연 바람직한가, 축적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가를 살펴야 함¹²⁾

10)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칼럼, 2018.1.1.)

11) 김보영(2017)

12) 이에 대해 김보영(2017)은 “마치 권위주의시절 정보수집 활동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

II . 고3 수험생 82%,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

작성: 노명순 연구위원 ☎02-6288-0525

최근 입시를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은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응답자의 81.8%),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응답자의 66.8%)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더 이상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가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복불복 전형’으로 서민·중산층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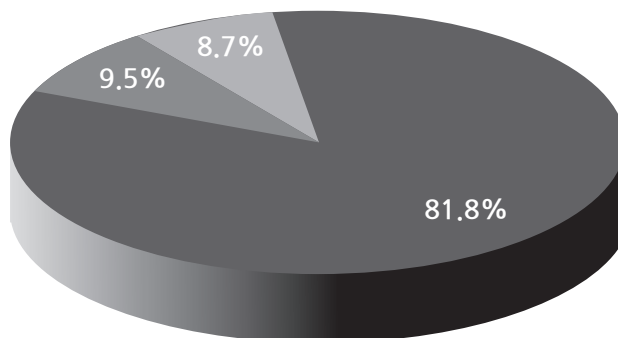
II. 고3 수험생 82%,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

1. 대입전형에 대한 고3 수험생의 인식

- 조사결과, 수험생이 바라는 대입정책은 “정시 확대하여 공정성 강화”하는 것
 - 진학사에서 2018학년도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 1,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19~1.23) 결과 발표
- 응답자 81.8%(1,133명), ‘정시가 더 공정하다’
 - ‘수시’라고 응답한 학생은 9.5%, ‘모르겠다’는 8.7%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이 공정한 입시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시 ■ 수시 ■ 모르겠다



○ 응답자 66.8%(925명), ‘적정 정시 선발 비율은 40% 이상’

- 수능 상위권인 국영수 영역 평균 1등급대 학생은 87.7%가, 4등급 이하에서는 55.3%가 정시 선발 인원이 ‘40% 이상 늘어야 한다’고 응답

[표] 정시선발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적정 정시선발비율	1등급대		2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 미만	2	1.1%	7	2.4%	3	0.8%	20	3.8%	32	2.3%
20%~30%	2	1.1%	11	3.8%	20	5.1%	50	9.5%	83	6.0%
30%~40%	16	8.9%	59	20.5%	82	20.8%	99	18.9%	256	18.5%
40% 이상	157	87.7%	205	71.2%	273	69.3%	290	55.3%	925	66.8%
모르겠다	2	1.1%	6	2.1%	6	4.1%	65	12.4%	89	6.4%
합계	179	100.0%	288	100.0%	394	100.0%	524	100.0%	1385	100.0%

○ 대입 공정성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

- 수험생들은 노력이나 실력보다는 돈이나 운, 부모의 직업에 의해 대학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수능은 ‘줄 세우기’식이지만,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그 결과를 더 쉽게 납득하고 있음¹³⁾

13) 이와 달리 수시가 더 공정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정시는 수능 하루로 결정되는데 수시는 3년 간의 학업생활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정시는 돈 많고 도시 사는 학생이 유리하다고 답함

2. 현황

- 수시전형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대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
 -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 74%, 수시모집 전체 모집인원(25만8920명) 중 학종은 32.3%(8만3553명)로 역대 최대
 -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종 비율은 과도하게 높은 편으로 모집정원의 약 45%가 학종
- 각종 대입 비리 양산
 - 학생부 기재용 스펙쌓기 경쟁 과열, 상장 몰아주기,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 논문 자녀 끼워 넣기 사례 적발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학생부를 무단으로 고치는 사례 급증
 - 2016년 고교에서 학생부 수정한 건수는 182,405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최근 5년간 고교 학생부 정정 현황, 유은혜 의원실)

3. 대응 방안

-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지금보다 확대
 -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 학생·학부모·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시 확대
- 회피제척 시스템 적극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막혀 폐지된 회피제척 시스템을 법체계 정비하여 적극 활용
 - ※ 회피제척 시스템 : 수험생,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시스템. 교육부가 15억원을 투입하여 대교협에서 운영하였음
-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하여 대입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 학생부 기록 부정 시 처벌 강화, 부정의혹 대학 전면 감사 및 재정지원 삭감

○ 전형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강화

- 세부전형기준까지 완전공개, 전형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화

III. 지방선거 대비 강소(強小)도시권 육성 플랜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02-6288-0528

지방중소도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재정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심지기능 강화 대책이 시급함.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2-5개 시·군을 연계하는 강소도시권 육성과 지방도시 연합 형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및 재정분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강소도시권의 개념 및 기능

- (개념) 인구수는 적지만 주민생활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권역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다양한 주거지 경관을 갖는 지역의 기초공간 단위로 정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소도시는 기초중심지, 중도시는 중위 중심지 기능을 갖도록 지정한바 있음
 - 지속가능한 유럽도시현장(라이프치히 현장, 2007)에서 중·소도시권은 지리적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
- (기능) 강소도시권은 기초중심지, 중위중심지로서 대도시의 인구유출을 막는 댐기능,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기능, 국토의 자연환경·역사문화 및 공동체 관리 기능을 함
 - ※ 독일은 인구 10만명 이하 중도시로 중위중심기능과 5,000명 이상의 소도시로 기초 중심지 기능을 갖는 중 소도시가 3,057개소로 국토의 약 70%, 전체인구의 약 61%, 전체 일자리의 약 56% 점유

2. 지방중소도시의 현안을 통해 본 강소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 인구분포의 지역 양극화 심화

-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군지역, 소도시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불균형이 심각
 -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을 연결하는 경부축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집중됨
- 경부축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대도시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며 중심지기능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광역시를 제외한 147개 시·군지역 중 인구 20만명 이하 107개 시·군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24%, 인구 10만명 이하 78개 시·군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8.34%에 불과(통계청, 2015)
 - 이들 지방중소도시의 대다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

□ 극심한 인구유출과 중심지기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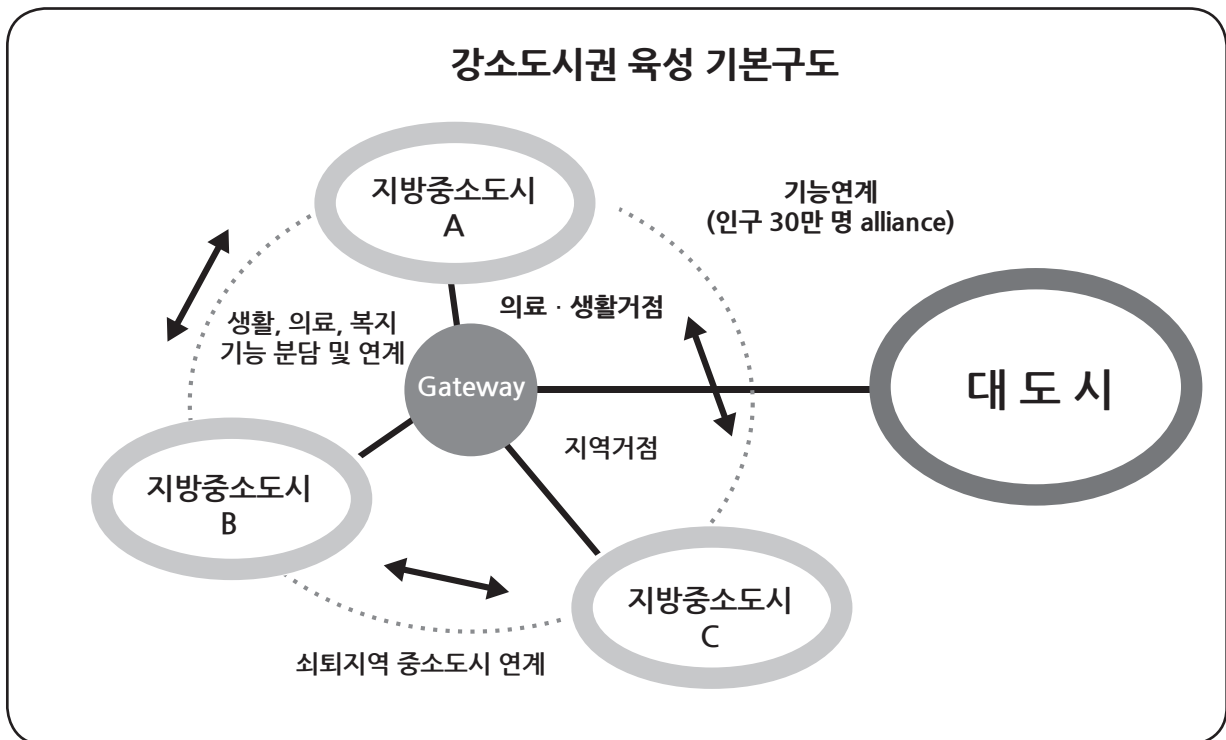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도시 축소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과 도시 중심지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에 87개소 분포, 전
국토면적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수는 전국의 8.34% 차지(2015년
기준),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소도시의 고령화율은 30.5~34.9%로 대도시의
고령화율(19.0%)보다 매우 높음(통계청, 2016)
- 중·소도시들이 제반 생활서비스시설 미비로 중심지 기능을 못해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
 -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적 생활서비스, 안정된 복지, 삶의 질 수준 등이 낮아지면서
공동체와의 사회적 결속력,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는 실정

2. 지방선거 대비 강소도시권 육성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 강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 지방 전체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건강한 소도시 육성
 - 국토의 60%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 주거복지 등 기초서비스 제공
- 인구 30만명 수준의 강소도시권(alliance) 형성
 -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10만명 이하의 시·군이 연합하여 30만명 규모의 강소도시권 형성
 - 지역의 관문(gateway), 혹은 중심지 기능이 집약된 버스터미널, 시장, 종합병원 주변지역을 건강·복지·의료·생활 거점으로 재생
 - 지역의 관문(gateway)과 중심지에서 공항 및 KTX역 등 광역교통시설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의 공유성과 공공성 강화

[그림] 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구도



□ 강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정주+의료+문화+생활 복합화를 통한 소도시 중심지 재생 추진
 -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소도시 중심지 기능을 회복
 - 지방세, 공공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우선 확보 및 지원
- 지방분권화 실현 및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 지자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융합 확대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재정분권 추진
 -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 · 조정 지원 및 지자체와 특별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
- 지역기반의 통합개발과 분권형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 지역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역통합개발체제 구축
 - 국토부, 산자부, 복지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을 지역에서 통합집행 지원
 - 분권형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사업구상-계획-집행-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관리지원을 위해 정부, 대학, 의료재단,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참고] 강소도시권 육성 가능한 유형

□ 시·군의 인구규모나 여건에 따라 기능을 공동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강소도시권 형성 가능

- (스마트혁신도시 연계형) 혁신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효과를 확산시키는 혁신도시 연계형
 - 혁신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KTX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생활권 조성
 - 혁신도시-주변중소도시-KTX역이 상호연계되는 지역 중심지에 의료, 상업, 쇼핑, 관광이 가능한 건강·의료·복지단지 조성
- (귀농귀촌 지원형) 농촌, 산촌, 어촌 지역거점에 베이비부머의 귀촌을 지원하는 정주거점 조성
 - 스마트 농업·임업·어업이 가능하도록 주변 도시와 농촌지역을 연계하여 일자리+정주+의료+상업기능이 집약된 중심지 육성
 - 생활권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어촌 거점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주공간 조성
- (관광·휴양형) 쇠퇴한 산업(조선, 철강 등) 지역 및 방치된 섬, 동계올림픽 사후시설 등을 관광·휴양형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주생활환경을 개선
 - 폐조선소 등 쇠퇴산업 유휴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국제적인 앵커 시설물과 건강·휴양시설, 문화·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한 해양친수 관광힐링단지 조성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